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박 병 흥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정책팀 팀장

1. 서 론

국민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도시민의 농어촌과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즉, 농어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Well-Being)을 중시함에 따라 전원생활, 농어촌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농촌관광 경험자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불균형 성장 정책의 결과 농어촌 정주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의료 인프라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어촌학교 통폐합, 교원의 농어촌근무 기피 등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악화도 지속되고 있고 농어촌의 노후주택(30년 이상) 비율이 도시지역의 4배 이상 수준이다. 또한 농어촌 인구는 2000년도에 20%수준으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04)이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젊고 일할 만한 계층의 이촌향도로 인한 고령화는 지역사회 유지 및 국토공간의 체계적 관리·정비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은 수도권 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GDP비중 47.9%)과 과밀문제 심화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고물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의 여건을 개선하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농어촌 생활환경과 교육·복지·문화

여건 개선, 도농교류 활성화 등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05. 4)해 오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감소, 전문인력 부족과 도시 과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고 농어촌을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시민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단계별 지원체계 정비,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의 의의 〉

농어촌활력 증진 : 농어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 농어촌 지역 인구유지는 교육·의료·문화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마을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반
-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 경관 관리, 향토 산업 등 부존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인적역량 보완

도시문제 완화 : 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

- ◇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체재·이주하여 쾌적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 지방화·분권화 정책과 연계, 도시화 및 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축소,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

국토균형 발전 : 도농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 ◇ 국토의 83%를 차지하는 농어촌을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원생활공간으로 재편성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수요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이주의향을 조사하였고, 추가적으로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의 정주 만족도(587명)조사와 농어촌 주민의 수용태세 조사(2,000명)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총괄하였고 농어업특위, 농림부에서 설문문항 작성 등에 협조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전원생활형, 소득활동형)과 전원주택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특정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하였다.

이상의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도시민의 의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주도시민, 농어촌지역주민, 특정집단면접조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나. 도시민 농어촌 이주의향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 중 56.1%가 농어촌 이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내 이주 목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은 10.9%,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은 2.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40대·30대 순으로 이주의향이 높고, 이주시점의 연령은 50·60대가 64.5%로 상당수는 은퇴 후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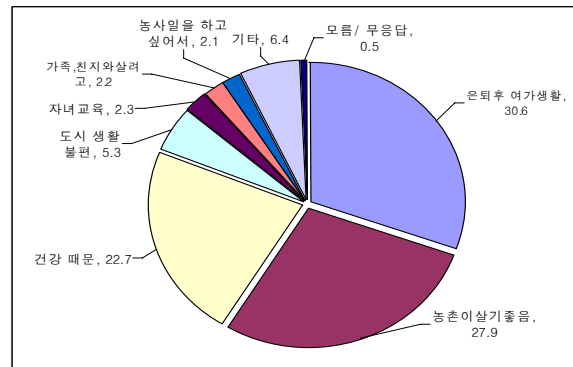


그림 1 농어촌 이주 동기

표 1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도 시 민	농촌지역 주민	농어촌 기이주 도시민
모 집 단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69세 성인 남녀 ('04. 12. 31 주민등록인구기준)	농어촌 지역의 만20세이상 성인 남녀 ('04. 12. 31 주민등록인구기준)	최근 10년 내에 농어촌 으로 이주한 도시민
표본크기	3,000명	2,000명	587명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전화면접조사	설문면접조사
조사기간	'05. 10. 12~10. 18	'05. 10. 29~11. 2	'05. 11. 1~11. 20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주)한국리서치	(주)리서치월드 시군농업기술센터

표 2 향후 농어촌 이주 의향

(단위: %)

구 분	사례수(명)	이주의향 있다	이주의향 없다	모름/무응답	계	
전 체	3,000	56.1	43.3	0.6	100.0	
성 별	남자	1,497	62.1	37.5	0.4	100.0
	여자	1,503	50.1	49.1	0.9	100.0
연 령	20대	666	49.6	50.1	0.3	100.0
	30대	715	54.8	44.7	0.5	100.0
	40대	691	59.6	39.9	0.5	100.0
	50대	514	65.0	34.2	0.8	100.0
	60대	416	51.6	47.0	1.4	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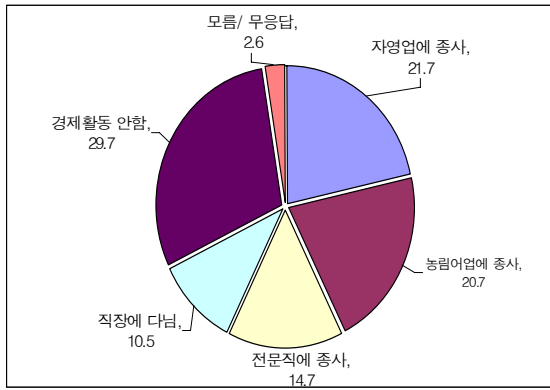


그림 2 농어촌 이주 후 활동유형

(사례수 2,38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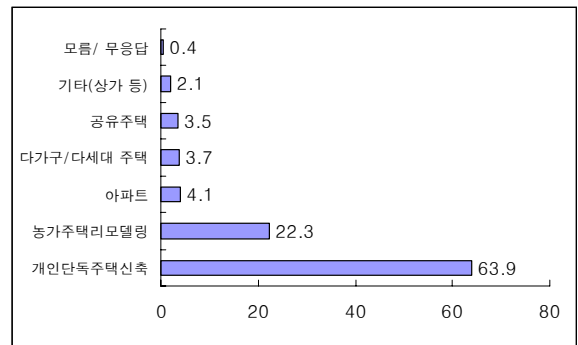


표 4 선호하는 주택유형

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이주동기는 은퇴 후 여가생활(30.6%)이 가장 많았고, 도시생활불편 때문이라는 응답은 5.3%로 낮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이주 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도시는민은 67.5%,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도시는민은 29.7%로 조사되어 일부 도시는민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이주도시는민 생활공간 조성 및 불편사항

이주희망지역으로는 마을 숲 등 자연경관이 좋은 곳 (65.2%)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은 사업여건이 좋은 지역 (14.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지역 위치는 도시로부터 떨어진 원격지역(8.9%)과 읍면소재지(17.8%) 보다는 생활여건이 좋은 도시근교지역(55.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형태로는 기존마을 내 이주 (43.7%)를 별도로 조성된 단지내 이주(30.3%)보다 선호

(사례수 2,38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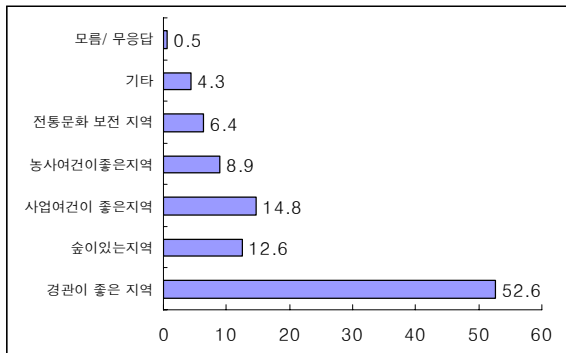


그림 3 이주시 선호하는 지역유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이주시 선호하는 주택형태는 개인단독주택(63.9%) 선호가 높으나, 농가주택 리모델링 수요(22.3%)도 상당 수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소유형태는 대부분 자기소유(86.7%)를 원하고 임대수요(7.7%)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체재형 주말농원의 임대 수요는 54.9%로 높게 조사되었고, 기 이주도시는민의 23.9%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촌 생활의 불편사항으로는 의료시설 미비(34.7%), 교육환경 열악(24.4%), 생활편의시설 부족(17.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주도시는민과 농어촌 주민의 경우 교육·의료·편의서비스는 주로 읍·면소재지(50~55%)를, 문화서비스는 인근 지방도시(44%)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서비스 이용지역

(단위: %)

서비스 구분	이용지역	이주도시는민 (587)	농촌지역주민 (2,000)
교육시설	현거주마을	12.3	29.2
	읍·면소재지	49.9	37.0
	인근지방도시	22.7	22.1
보건·의료시설	현거주마을	5.6	29.8
	읍·면소재지	56.9	43.2
	인근지방도시	29.6	22.8
소비·유통시설	현거주마을	6.6	27.3
	읍·면소재지	55.9	44.1
	인근지방도시	31.5	25.6
문화·여가시설	현거주마을	12.4	11.1
	읍·면소재지	23.9	21.2
	인근지방도시	43.6	47.9
교통생활편의시설	현거주마을	11.2	34.2
	읍·면소재지	57.1	37.9
	인근지방도시	26.4	22.3

표 4 정부 지원 희망사항 (단위: %)

정 부 지 원 사 항	도 시 민 (3,000)	이주도시민 (587)
농촌생활 여건 개선	41.9	28.1
일거리의 제공	17.8	14.1
자금 지원(융자)	15.9	23.3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8.2	7.0
교육 및 훈련	8.0	14.0
정보제공과 상담	4.2	10.2

라. 농어촌 이주 준비 및 정부지원 희망사항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를 위해 준비하는 사항으로는 주택·토지에 대해 알아봄(49.7%), 저축을 함(38.3%), 농어촌 이주 관련 정보 탐색(28.1%), 직장·사업 등을 알아봄(14.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농어촌 생활 관련 정보는 주로 농촌이나 도시에 사는 친지·친구(51.5%)를 통해서 얻고, 방송·잡지(21.5%), 인터넷(13.4%)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이주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보(27.6%), 주택·토지(22.3%)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희망사항으로 도시민은 교통·교육·복지·문화 등 농촌생활여건개선(41.9%), 일거리제공(17.8%), 정착자금지원(15.9%)을 요청하였고, 이주 도시민은 생활여건 개선(28.1%), 자금지원(23.3%), 교육·훈련(14.0%), 정보제공·상담(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마. 농어촌 이주도시민 지역사회 참여 및 융화

이주도시민과 농어촌주민간의 관계는 농어촌 주민의

73.1%가 이주도시민과 잘 지낸다고 응답하였고, 마을에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이주도시민도 92.7%로 나타났다. 농어촌주민의 72.9%가 도시민 이주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전문가집단심층면접조사(FGI)나 현장실태조사 등에서는 이주도시민과 농어촌주민이 함께 갈등문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92.8%는 이주 도시민이 마을에 적극 참여 내지 협조를 희망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은 이주한 도시민에게 농산물가공·유통(26.5%), 지역개발·관광(15.1%), 청소년교육(13.9), 생산기술(10.7), 정보화(8.2), 사회봉사(7.1)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정책적 시사점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의향은 높지만 생활불편·일자리 등 제약요인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주거모델 등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큰 불편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민의 이주수요를 감안, 도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기존마을내 거주, 기존주택 리모델링, 임대 등 다양한 수요에도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이주입지로는 경관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마을 숲 등 경관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고, 마을-읍·면소재지-인근도시를 연계하는 생활편의·교육·복지·문화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이주 준비단계에서 실행, 정착단계까지 토탈서비

표 5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민 이주자의 관계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①아주잘 지낸다	②대체로 잘 지내는 편이다	①+② 잘지낸다	③ 별로 잘 지내지 않는다	④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	③+④ 잘 지내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898	9.0	64.1	73.1	21.2	3.5	24.7	2.3	100.0

표 6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이주자 간 바람직한 관계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마을일에 적극 참여해야 함	마을일에 참여는 안해도 협조적	인사하는 정도로만 지내도 좋음	주민과 교제 없이 조용히 사는 것이 나옴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2,000	49.2	43.5	4.7	2.1	0.5	100.0

스를 제공하고, 이주 후 경제활동 의향을 감안 일자리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이주도시민이 농어촌 주민과 융화되고, 유통, 농촌관광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가. 기본개념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의 기본개념은 전통과 숲이 있는 농어촌마을로써 기초생활환경시설과 교육·복지·문화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며, 이주도시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즉, “마을”에는 이주도시민이 살 만한 주택이 있고 상·하수도, 도로 등 기초생활시설이 큰 불편 없이 제공되며, “마을 주변”으로 숲과 조화를 이루고 마을 안팎의 경관이 잘 보전·활용되어 있다. 그리고 준 도시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읍·면소재지 및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교육·복지·문화서비스 제공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주도시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는 이주도시민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하는 곳이다.

이러한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점추진과제로 정주공간 조성, 이주단계 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체계 정비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비전	농·도 상생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	
목표	농어촌 거주인구를 전 국민의 20%로 유지	
중점추진과제	정주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 마을주변 : 숲 활용 및 경관개선 ▪ 중심읍면 : 교육·복지·문화 서비스중심기능 강화 ▪ 거점도시 : 농어촌 지원기능 강화
	이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 종합적인 정보제공·안내 및 사전교육 ▪ 실행 : 정착자금 지원, 일자리 등 알선 ▪ 정착 : 지역사회 참여, 농어촌 주민과의 융화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제도 도입 ▪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고 싶은 주거단지 조성 등 시범모델 제시 후 전국으로 확대 ◇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2. 도시민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

가. 마을 단위 주거공간 조성 확대 및 추진방식 다양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농어촌이주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2.5%로 이를 수도권 인구로 환산할 경우에 30~40만명의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민의 이주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13년까지 신규 주거단지인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을 지원하되, 도시민 이주수요에 맞춰 사업물량을 추가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호응이 높은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이주도시민의 주거지원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민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은 정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확산이 필요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전원마을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정책은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기존마을 내 입주 선호를 감안하여 도시민 입주공간과 기존마을을 동시에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입주자 특성별로 입지선택, 시설지원, 소유·임대방식 등 사업 메뉴를 다양화하여 도시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 마을 주변 숲 활용 및 경관 개선

숲은 국토의 64%, 농어촌지역의 77%를 차지하는 핵심자원으로 마을 숲을 경관자원, 휴양·휴식공간 및 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의 65%가 숲 등 자연경관 좋은 곳으로의 이주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농어촌마을의 핵심경관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2008년까지 총100만 ha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며, 주민의 필요에 맞게 마을 주변 숲에 숲탐방로, 등산로, 생태숲, 산악레포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도시민,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숲을 가꾸고 정부는 산책로, 삼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산림의 혜택을 공유하는 「국민의 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산림소득원 확대를 위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내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 산림공익시설 설치, 산채·약초·버섯류 재배 등을 허용하고,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대부시 용도제한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농업경관 보전·관리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메밀, 유채 등 경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07년까지 시범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직불 대상작물의 범위 및 기준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인 농어촌경관 보전·관리정책의 기반으로선 선진국수준의 농어촌경관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관지표 개발을 토대로 현재 농어촌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주민·지자체간 경관보전협약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 경관의 종합적인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특성이 반영되도록 경관계획수립에 필요한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관계획 수립 기준을 건설교통부·농림부·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소도읍·중심면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기능 강화

자연마을은 인구가 적어 생활편의·교육·복지·문화 서비스의 자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주 도시민의 50~55%가 읍·면소재지에서 생활편의·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문화서비스는 44%가 인근 도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읍·면소재지-마을로 이루어진 농어촌 정주체계에 맞추어 교육·복지·문화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05. 4월 수립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에 따라 추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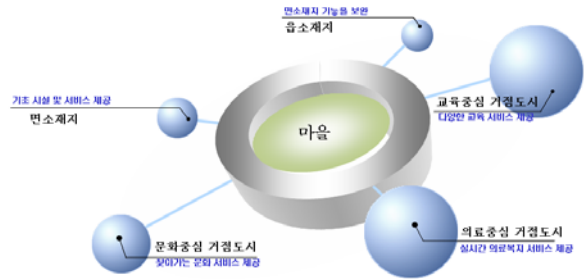
마을단위로 지원이 어려운 시설·서비스는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도읍의 서비스 권역 내 농어촌마을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도읍 육성사업을 보완하고, 소도읍 자체뿐만 아니라 농어촌 마을에 대한 복지·문화 및 생활편의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 소도읍의 서비스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는 면소재지(중심마을)를 군당 2~3개소를 육성하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3년간 70억원이내(국고 80%, 지방비 20%)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라. 거점도시의 농어촌 지원기능 강화

거점도시는 읍·면에서 제공이 어려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정비하여 농어촌 마을, 읍·면과의 연계체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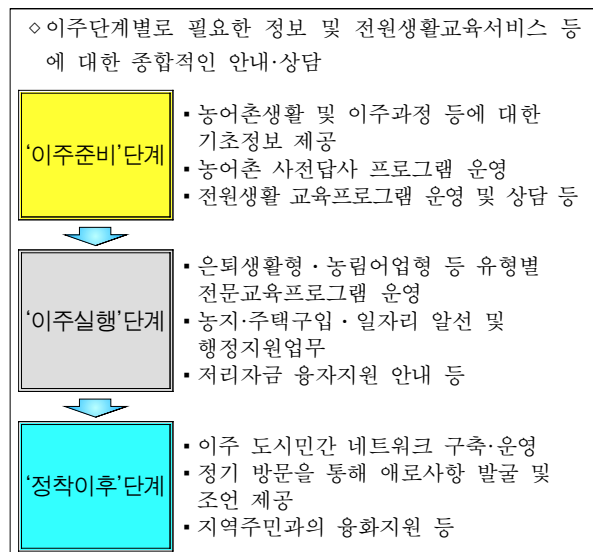
를 구축하고 교육, 의료, 문화 등 단일기능에 특화 또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운행, 종합병원과 협약체결 등을 통해 거점도시의 서비스 권역에 속하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공공 혹은 민간 베이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을과 거점도시간 특화서비스 연계



3.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단계별 지원체계 정비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불편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계별(준비-실행-정착)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가. 준비단계: 종합 정보제공 및 사전교육

'05. 7월부터 각종 온라인 정보 제공, 사이버 교육, 농지·주택 정보 제공이 가능한 농어촌종합정보포털(<http://>

www.nongchon.or.kr)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 요구에 맞게 정보내용 및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귀농·귀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06. 4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농어촌종합정보포털과 더불어 오프라인 서비스 체계도 구축하여 전화·방문상담, 현장안내 등의 기능도 담당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종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국농촌공사내에 농어촌종합정보센터(1577-1417)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의향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원생활교육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사례소개 위주의 소양과정 외에 작목별 심화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포함하는 장단기 직업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나. 실행단계: 정착자금지원 및 일자리 등 알선

주택개량융자금 지원대상을 이주도시민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주택의 신축·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융자한도를 확대하는(30→40백만원) 한편 금리도 인하(3.9→3.4%) 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의 부족한 인적 자원을 보완하고 도시민의 경험·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농어

촌종합정보센터에 인력알선기능을 추가하여 마을·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이주 의향 도시민간 연결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주택제공 등 지원을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다. 정착단계: 지역사회 참여 및 농어촌 주민과의 융화

마을리더양성 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컨설팅'사업을 확대하고, 출향인사 및 지역대학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도시민, 지역주민, 기관·단체 등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마을·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계획체제를 정비하고, 마을주민, 지자체, 이주도시민 등이 참여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수립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읍·면단위 계획 수립시 인근 마을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인근 마을 이장대표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심사·승인된 마을계획과 읍·면 단위 계획을 바탕으로 시·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로드맵에 따라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계별 농어촌 정주지원서비스 제공

	이 주 과 정	관 련 서 비 스 (제공주체)
준비단계	기초정보탐색	귀농·귀촌 사례소개, 농지·주택정보 등 (농어촌종합정보망)
	이주지역탐색	전원생활유망지역 현지답사, 관련자료 수집 (농어촌종합정보센터)
	전원생활소양교육	단기교육수료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기술센터 등)
실행단계	이주비용준비	영농, 가계지원용 저리자금융자 (농어촌종합정보센터 알선→농협, 지자체 등)
	농지·주택구입	농지·주택 소개 및 행정업무지원 (농어촌종합정보센터, 지자체)
	구직·사회봉사	일자리, 사회봉사활동 등 알선 (농어촌종합정보센터)
정착단계	지역주민과 융화	지역개발사업참여 유도 (지자체)
	애로사항 해소	사후컨설팅 추진 (농어촌종합정보센터, 지자체 등)
	이주도시민간 네트워크	On/Off-line상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농어촌종합정보센터)

또한 이주도시민과 농어촌 주민간 융화를 위하여 도시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사전접촉기회를 확대·다양화하고, 10평 내외의 소규모 주택이 딸린 체재형 주말농원을 임대형·분양형 등으로 다양화·활성화하여 도농접촉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주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이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주할 계획이 있거나 이주한 도시민이 지역의 문화, 전통, 가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군, 읍·면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이나 고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한 도시민에 대해 일정기간 농촌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고층과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는 「1이주민1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농어촌주민과 이주도시민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 등 마을단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4.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가.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협약제도 도입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관련사업의 연계·추진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로 계획 이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군이 이주도시민 주거공간조성사업(전원마을, 농산어촌종합개발)과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관련 사업의 연계방안을 3~5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검토하여 각 부처 사업·시책과의 일관성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검토를 거친 후 중앙부처 공동으로 계획을 승인하는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 협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는 재원 확보, 정책 조정 등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다.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급 정책 협의체제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의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관련 부서를 종합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종합기획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괴산군 혁신

신경제기획단,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안동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단, 진안군 정책개발팀, 서천군 어머니티기획팀, 장수군 장수발전기획단을 두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도읍·중심면 단위에 배치가능한 중대규모 사업만으로는 농어촌 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이 곤란하므로, 마을·소권역 단위로 지원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 메뉴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연계·지원할 중앙부처사업이 없는 경우에 대비, '협약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관련사업 정보를 공유, 불필요한 사업 중복 방지 및 연계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 '06년 중 마을, 소권역, 읍·면별 교육·복지·문화·기초생활환경 서비스 현황 및 계획 정보를 집대성하여 농산어촌 교육·복지·문화·기초생활환경서비스 맵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도시민이 농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현지 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노력과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인구감소 시·군을 중심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작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를 촉진·내실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자체(시·군)의 도시민 유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도시민 유치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구체적 시책을 기능·성격별로 구분하여 대책 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일부 시·군(10~20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이미 도시민 유치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 중인 시·군, 인구 과소화 지역 시·군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수립과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인구동향,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기초 통계자

료 분석이 필요하다. 통계청 등 각 부처에서 관련 통계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사회통계를 제외하고는 농어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활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농어촌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가 생산하고 있는 통계로서 도시·농어촌의 구분이 필요한 모든 통계에 농어촌분야를 구분하여 발표하고, 마을, 농촌경관, 전문인력·사회기업 등 새로운 농어촌 관련 통계 발굴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 해수부, 통계청 등 관련부처 공동작업단을 구성, 농어촌통계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이 도시와 농어촌에 차등 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농어촌 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이 도시에 준하는 삶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문화서비스를 포함한 정부시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 분위기 확산

적극적인 홍보 및 분위기 확산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유도하고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저명인사 전원생활 사례, 전원생활 교육 소개, 전문가 기고·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성공 포인트, 발전방향 등을 분석 보도(연재)하고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및 주요 민간 포털 사이트와 연계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주준비가 구체화된 도시민을 위한 박람회 및 전원생활체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박람회는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도시민 정착마을, 일자리, 농어촌정주생활체험 등 직접적인 농어촌 이주생활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연합회, 생협 등 도시지역 시민단체 적극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민 전원생활체험단' 모집·견학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공무원의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를 위한 광역단위 순회심포지엄(토론회)을 개최할 계획이다.